

부정채용·입찰비리...한전·자회사 '도마위'

고졸 전형에 대졸 64% 채용·기밀유출 시도 직원 경징계 퇴직자 회사에 수주 혜택·38억 무인헬기 애물단지 전락

국감 현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 등 한전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해당 기관과 직원들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업무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전 산하 공기업들의 부정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해 2월 2직급 부장을 모집하면서 '자사근무 20년, 퇴직 1년 이내'인 자로 응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내서 자사 퇴직자의 자리를 쟁취했다. 또 중부발전은 최근 3년간 별도의 공고나 공개경쟁 없이 자사 퇴직자를 계약직원으로 채용했다. 어 의원은 또 한전KPS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졸 전형으로 채용한 직원 354명 중 64%인 226명이 대학졸업자였고 같은 기간 한전원자력연료도 '생산분야에 대한 고졸 수준 채용'공고를 내면서 대학졸업자들이 동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직 92명 중 61%인 56명을 전문대 졸업자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한전KDN은 면접전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을 개정해 놓고 2015~2016년 3차례 채용시험에서 내부직원으로부터 면접을 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감사원이 한전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본부들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승인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전소 시공업체에 각종 미공개 정보를 흘리거나 인허가 편의를 봐준 74

KPS로부터 지난 9년간 33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고, 이중 수익계약은 71억 여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밀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훔쳐 구속됐던 한전기술의 직원이 내부적으로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전이 38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무인헬기가 정작 운용능력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한전KPS 인건출장소 등 3개 출장소 작업 현장에 단기노무원 31명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한전KPS 직원 8명 등이 검거됐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은 789억원, 과다 납부액은 2500억원으로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의 약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계고장 같은 물리적 결합보다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등의 한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한전이 중국 풍력 및 캘리포니아·괌 태양광 등 해외 신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규정에 따른 투자검토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상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석열 지검장 국감 출석 2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법 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남뉴스

국감 브리핑

박지원 "윤석열 지검장, 우병우 구속 수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서울고검 등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년 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팀장에서 해임돼 당시 여수지검장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던 그 기개로 우병우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윤 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중앙지검장에게 했느냐고 맨 첫 번째로 질문하자, '보고했다'고 답변을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쫓벌해방의 동기를 만들었다"며 "윤 지검장이 그때의 기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사실을 숨기려고



노트를 폐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우병우·추명호·최순실 3각 관계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윤 지검장이 우병우에게 신세진 것이 있느냐, 4년 전의 기개로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제가 2014년 국회 정보위에서 추명호의 잘못된 점을 다 지적했고, 만만회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저를 조사했고, 증인 신정도 받아 주지 않았다"며 "당시 추국장, 만만회 관련자들만 제대로 수사했으면 오늘날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주선 "불법조업 중 어선 미납 벌과금 5년새 4배 ↑"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3일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납부하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 대비 4.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과금 상향조치 등 제재 강화가 불법 어업활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1885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나포됐다. 이들 어선에는 1352억 3400만원의 벌과금의 부과 됐는데 이 가운데 1031억 2900만원이 징수됐으나 321억 500만원



(23.7%)은 미납됐다. 5년 전인 지난 2012년 국감 당시 '최근 5년간(2008~2012년 8월) 벌과금 미납액' 72억원과 비교하면, 미납된 벌과금이 무려 4.4배나 급증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2016년말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과금 한도를 상향한 바 있고, 벌과금을 내지 않은 어선의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이 구속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어선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런데도 벌과금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재 강화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주문했다. /*김정욱기자 khh@

국정감사 전반기 채점 결과는 'C-'

NGO모니터단 평가 "적폐청산-무능 심판 함몰 깊이 부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의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3일 국정감사 전반기에 대해 "적폐청산과 무능 심판 논란에 함몰돼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C-학점'이라는 평가를 했다.

NGO모니터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의 공수만 바뀐 채 과거 국감과 판박이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우선 "대부분 상임위에서 적폐청산과 신적폐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이 있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 대립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피감기관이 701개로 작년보다 10개 늘었지만, 30일 동안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놓고도 20일만 감사를 하기로 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사건건 '으르렁'

원전 공론화위 활동·현재소장 임기 등 입장차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으나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해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며 "정지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정책 전

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며 속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예산 손실액 1000억원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정 원내대표는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전남 3곳 새 지역위원장 임명

여수울 정기명·순천 서갑원, 나주·화순 최종석

더불어민주당은 여수울과 순천지역 위원회 새 위원장에 정기명(변호사) 여수울 상임 수석부위원장과 서갑원 전 국회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공석인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에는 최종석 전남도당 부위원장(나주·화순 상임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온 여수울·순천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 공직 임용에 따라 사고지역위원회가 된 나주·화순을 비롯한 전국 19개 지역위원장을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기명 여수울지역위원장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주철현 직무대행(여수시장)이 단체장으로서 선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상임 수석부위원장 겸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다.

서갑원 순천지역위원장은 제17·18대 국회의원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부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전남선대위 공동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주 최고위 회의에서 인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석 나주·화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상임부위원장 및 도당 부위원장, 대선 때 전남선대위 공동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